진실을 만나다 - 밀레
WWW.MILLET.CO.KR

光州日報

광주 22/30℃ 목포 21/28℃ 여수 23/26℃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274호 1판 2012년 7월 16일 월요일

단기 4345년 (음력 5월 27일)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위기의 전남대

총 총장직선제 약인가 독인가

"학원 자율화 상징" "부작용 너무 크다"

'총장 공백' 초유의 사태 우려속 존폐 놓고 뜨거운 논란

전남대학교 박창수 총장 당선자가 전격 사퇴 표명을 하면서 전남대가 극도의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 상태에서는 재선거가 유력한 가운데, 총장 선거가 다시 치러질 경우 일정상 '총장 공백기'라는 초유의 사태마저 우려된다.

전남대는 검찰 수사로 인한 충격과 오는 8~9월로 예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각종 대학 평가에 대한 준비 부족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중심에 '총장 직선제'가 있음은 분명하다.

교과부와 검찰은 최근 전남대 총장 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총장 직선제와 관계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남대 구성원의 상당수는 이번 수사가 대학이 직선제 폐지를 수용하지 않아 당하는 불이익으로 생각한다. 지난 5월 직선제를 고수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한 뒤라 의구심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교과부가 구조개혁과 예산을 내세워 대학을 굴복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직선제 폐지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총장 직선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맞서고 있다.

직선제 고수를 주장하는 교수나 학생들은 '총장직선제=타협 불가'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대학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전제로 이뤄진 공동체이고,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정권의 입장에 따른 직선제 폐지는 양보할 수도 없고 강요로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전남대에 있어 총장 직선제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 대학을 지켜내고, 한국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낸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상징성과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전남대 한 교수는 교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총장 직선제는 돈 몇억(예산 중단)에 혹은 구조조정이라는 협박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며 "각종 지수에서 전국 15위 안에 드는 전남대가 구조조정 대상이라면 국내 대학 90%는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며 정부의 직선제 폐지 주장은 치졸하고, 명분이 없다고 비난했다.

교과부는 매번 총장 직선제가 치러지면서 대학이 학연·지연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등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는 교수들은 직선제가 민주화의 산물인 것은 확실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오히려 화합을 해치는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학 역량을 허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과부 방침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각종 대학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아 대학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실용적인(?) 의견도 직선제 폐지 쪽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의과대의 한 원로 교수는 "초심은 사라지고 대학사회에도 언제부턴가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면서, 선거만 끝나면 선후배 간에도 소 닭 보듯이 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대 총동창회는 "사회환경 변화와 수차례 직선제를 통해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생각할 때 직선제 폐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의 확고한 입장으로 인해 모교와 재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직선제 폐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윤수 현 총장은 지난 9일부터 단과대별로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와 직선제 폐지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여기에 박창수 총장 당선자가 13일 사퇴를 표명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직선제 존폐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정직한 '농부 대통령' 되겠다"

박준영 전남지사 대선출마 선언…"지사직은 당분간 유지"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박 지사는 이날 출정식에서 '탐욕과 분노를 넘어,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출정식에는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과 이낙연·김성곤·김승남·김영록 의원, 전남도의회 의원 등 내·외빈 2000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민주당 지킴이 박준영이 당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선봉이 되겠다"며 "농부의 아들로 흙과 함께 자랐다. 정직을 생명으로 한 농부처럼 정직한 농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어 "농업에서 새로운 가치와 성장의 기회를 찾겠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해 친환경 중농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3%인 식량자급률을 50%까지 올리겠다"며 "농업·농업인·농촌을 함께 살리는 3농(農)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뿐 아니라 유기농 생태농업기술과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지사는 특히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며 한미 양국의 평양대표부 설치 및 북한의 서울·워싱턴 대표부 설치를 제안했다. 민족의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해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또 "분권이야말로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 재정·경찰·교육 자치 확대와 깨끗한 정부·깨끗한 공기·깨끗한 물·깨끗한 흙으로 대표되는 '4깨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지사는 이 밖에도 ▲복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보편적 복지 ▲친환경 생태주의적 정부운영과 국토개발 ▲경제부문의 공공성 강화 등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 ▲소득 50% 이하 대학생 장학금 지급 ▲전 대학의 기숙사 시설 확충 의무화 등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이날 출마선언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컷 오프 통과 후 지사직 유지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유지하겠다. 선출된 지사로서 도민들에게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결선투표·모바일 투표와 관련해선 "민주당원들의 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경선 룰을 수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여러 후보들이 각자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 잘 전달돼 논의될 것으로 본다. 큰 틀에서 당이 정한 방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가 15일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에는 20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해 박 지사의 선전을 기원했다. /연합뉴스

2년새 4명 구속…'구청장의 저주' 광주 북구만 무사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인사나 공사계약과 관련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구속수감되면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지난 13일 공사 관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최근 2년 사이 구속수감된 구청장은 4명으로 늘어났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가운데 북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단체장이 구속돼 '구청장의 저주'라는 냉소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자치단체 공사와 관련 업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을 구속했다. 유태명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0일 만이다. 3선의 유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조직 및 측근 등을 동원해 4·11 총선 전 민주통합당 광주시 동구 경선에서 박주선 의원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황일봉 전 남구청장이 구청 계약직 공무원 채용 대가로 3500만원을 받아 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었다. 황 전 구청장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법정구속되고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언 전 서구청장도 비슷한 역정을 보여줬다. 2010년 6월 구속기소된 전 전 구청장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전 전 구청장 역시 자신의 재선을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인사와 관련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선거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달 광역시 자치구·군은 1순위로 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고 의회를 미구성하는 방안, 2순위로 특별시와 같이 구청장·군수는 선출하되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1차
■원서접수 : 8월 20일~ 9월 11일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원서접수 : 8월 6일~ 8월 20일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